

[주간동향] 2006. 8. 3~8. 9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
- ❖ 기혼 여성 재취업 비율 낮고 일자리 질도 낮아
- ❖ 보건복지부, 요양비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정안 마련
-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이용률 및 취업률 증가
- ❖ 경찰청, 여성 자살자 수 급증
- ❖ SK,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가속

❖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

노동부는 8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운용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계약기간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토록 했다. 무기계약 근로자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 기간의 갱신 없이 고용을 안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자는 각 기관의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서가 마련되면 내년 초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확정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근로 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민간분야에 비춰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토록 하고 KTX 승무원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부문의 외주 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여 핵심업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업무를 외주화할 때도 시장임금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 노동자의 갈등을 해소하기엔 크게 미흡하

다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안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책이 상시·지속 업무의 기간제 허용 예외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주변업무'는 외주화를 허용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직종이 '주변업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계는 정부의 대책안에 예산 계획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체계의 구성과 운영권한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기혼 여성 재취업 비율 낮고 일자리 질도 낮아

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는 8월 7일 여성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8%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적이 있으며 이들 중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6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혼 여성의 재취업률은 72.7%였으며 기혼 여성은 62.3%로 미혼 여성에 비해 약 10%가량 낮았다.

기혼 여성의 경우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이전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 여성 중 재취업 전 비정규직에 종사한 경우는 94명이었으나 결혼 후 재취업 때는 198명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비정규직이 110.6%나 증가했으며 이는 미혼 여성이 13.6% 늘어난 것에 비해 10배 정도 많은 수치다. 급여도 정규직 당시 평균 급여가 2,134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바뀐 뒤에는 1,617만원으로 24.2%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미혼 여성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급여가 올랐다. 이는 미혼 여성의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데 반해 기혼 여성들은 비정규직 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혼 여성의 재취업 직종으로는 텔레마케터(75%),영업직(37.5%),유통매장직(25%),생산조립직(12.5%) 등 전문지식 없이 근무가 가능한 분야가 많았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다니던 여성가운데 결혼 후 같은 규모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는 26.8%에 불과했으며 1,000명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7.6%가 결혼 전과 같은 규모의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과 육아는 기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33.1%)과 육아(19.3%), 결혼

(16.7%)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적이 있다고 답해 10명 중 7명(69.1%)꼴로 결혼, 출산, 육아로 직장생활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보건복지부, 요양비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다. 그 동안 요양기관 외, 즉 가정 등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 7만6천원으로,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요양비(출산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동 고시가 시행된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재정을 최대 120여억 원까지 투입할 예정이며, 약 1만여 명이 동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입안예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이용률 및 취업률 증가

노동부가 8월 3일 발표한 국가고용정보망(Work-Net) 통계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18만 6,8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8.1% 증가했다. 취업률도 4.4%포인트 높아졌다. 또 구인인원수와 구직자수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9.2%, 5.1% 증가하는 등, 고용지원센터의 이용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취업상황도 크게 개선되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장애인은 63.2%, 55세 이상 고령자는 75.7%, 여성가장은 13.3% 늘어났다. 이들 취약계층의 취업률은 평균취업률 24.4%에 비해 다소 낮은 19.6%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5.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전기·전자 관련직으로 29.4%이며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경영·금융·무역·사무 관련직으로 5만 8,111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 청년층이 일자리도 가장 많고 취업률도 높은 반면, 19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은 일자리도 적고 취업률도 낮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현황이 하반기에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팀을 취업지원과로 확대·개편하여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전담팀'과 '청년전담팀'을 별도 설치한다. 기업지원팀도 '기업지원과'로 확대 개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대행서비스와 각종 고용장려금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 수립과 진로지도·직업 훈련·직장체험·구직기술지도 등을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경찰청, 여성 자살자 수 급증

8월 8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자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401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루 평균 자살자가 약 38명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 자살자는 2001년 3천 430명에서 4천 400명으로 28.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 자살자가 8.6%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전체적으로는 2001년 자살자 중 남성이 72.1%, 여성이 27.9%였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남성이 70.7%, 여성이 29.3%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또 지난 5년간의 자살 동기를 살펴보면 염세·비판 44%, 병고 24.4%, 치정·실연 8.8%, 가정불화 6.9%, 정신이상 6.3%, 빈곤 4.9%, 사업 실패 3.1%의 차례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41~50세(24.1%), 31~40세(18.5%), 51~60세(15.6%), 21~30세(10.4%), 20세 이하(2.8%)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718명이나 늘었다"며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자살예방기본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SK,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가속

재계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소통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SK그룹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 소외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8월 6일 현재 SK(주),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각 계열사가 특성에 맞게 동참한 결과 소외계층 등의 취업자 수가 1천440여명에 이른 것으로 그룹은 집계했다. 저소득층 여성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보조원으로 취업토록 하는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파견사업'은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취업자 수를 기록,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에게 식사를 만들어 배달하는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23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기초학습교사, 체육교사 등 145명의 여성인력을 채용하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200여 곳에 파견했다. 또 내달 주유소 16곳에서 60세 이상 노인 주유원 32명을 채용하는 데 이어 소외계층 18-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무료 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취업을 앞선할 계획이다.

앞서 SK는 내년 말까지 4천23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작년 5월 밝혔으나 이후 관련부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4천680명까지로 늘렸다. SK는 여기에 모두 5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들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 중반쯤 추가적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